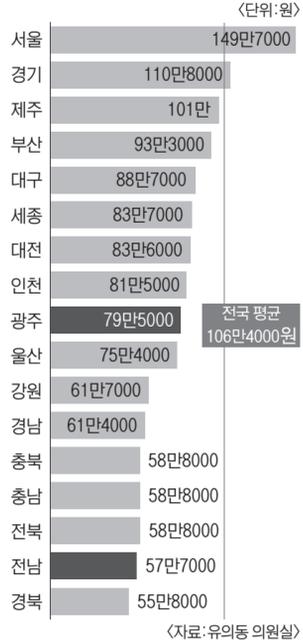


주택연금도 부익부빈익빈...지역간 2.6배 차이

■지역별 주택연금 평균 수령액



월평균 수령액 광주 79만5000원·전남 57만7000원
전국 평균 106만원 크게 밀돌아...가입자 수도권 쏠려
서울 149만7천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제주·부산 순

서울과 전남의 주택연금 월 평균 수령액이 2.6배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된 노후를 위해 매달 연금방식으로 받는 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지역 간 2배 넘게 격차가 있는 것으로, 소득 불균형 심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정부위원회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을)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말 기준 주택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광주 79만5000원, 전남 57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 수령액은 9번째, 전남은 16번째로 많았다. 두 지역 수령액 모두 전국 평균 106만4000원을 크게 밑돌았다. 전남지역 수령액은 서울의 38.5% 수준 밖에 되지 않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수령액이 149만7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10만

8000원 ▲제주 101만원 ▲부산 93만3000원 ▲대구 88만7000원 ▲세종 83만7000원 ▲대전 83만6000원 ▲인천 81만5000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과 그 외 지역 수령액은 47만원이나 차이가 났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평균 수령액은 123만6000원이었고, 비수도권 평균은 76만6000원이었다. 최근 3년간 월 평균 수령액은 광주 61만4000원(2017년)→69만5000원(2018년)→79만5000원(올해 8월), 전남 50만1000원(2017년)→55만5000원(2018년)→57만7000원(올해 8월)으로 매년 오르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 수도권 편중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말 기준 전체 주택연금 가입자는 7629명으로, 이 가운데 수도권인 서울·경

기·인천 가입자가 전체의 63.4%인 4843명에 달했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36.5%(2786명)에 불과하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부산을 제외한 지역들의 주택연금 차지비율은 모두 5%미만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광주는 전체의 2.2% 수준인 165명, 전남은 1.1%인 82명만 주택연금을 가입했다. 광주지역 가입자는 지난 2017년 192명에서 지난해 215명으로 늘었지만 올해 8월에는 165명으로 전년보다 23.2% 감소했다. 전남 가입자도 2017년 84명에서 2018년 89명으로 단 다섯 명 늘었지만 올해 8월은 82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유 의원은 "집값에 비해 받는 주택연금은 설계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는 주택연금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주요 장애요인"이라고 말했다. 또 "전국 단위로 시행하고 있는 주택연금제도가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는 장치가 되지 않도록 보다 세밀한 정책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 '로또 청약' 불법당첨 134가구

전국 2324가구로 집계
불법거래 1361건 가장 많아



광주지역에서 최근 5년간 불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주택 수가 134가구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급등에 아파트 청약이 '로또'처럼 여겨지면서 거짓 임신과 전입, 대리 계약 등 다양한 속임수로 당첨을 노리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년 반 동안 경찰이 국토부에 통보한 불법 청약 당첨자는 모두 1536명, 이들이 간여한 불법 당첨 주택 수는 2324가구로 집계됐다. 광주지역 불법 당첨 주택수는 2015년 102가구, 2016년 15가구, 2018년 17가구 총 134건이었다. 전국적으로 연도별(경찰 수사 종결 시점 기준) 불법 당첨 주택과 당첨자 수는 ▲2015년 1343가구(341명) ▲2016년 161가구(593명) ▲2017년 2가구(2명) ▲2018년 609가구(461명) ▲2019년 7월까지) 209가구(139명)였다. 이들은 모두 주택법령에 따라 당첨이 취소됐을 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게 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불법 청약 당첨 2324가구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 거래 1361건 ▲위장전입 745건 ▲위장 결혼 14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자녀 허위 임신진단서·출생신고도 지금까지 6건 적발됐는데, 올해 4월 이후 국토부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전수(全數) 조사 등을 거쳐 56건의 임신진단서 위조 의심 사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라 이 유형의 최종 불법 판단 사례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안 의원은 "집값 급등을 부추기는 투기 세력 유입을 막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분양 기회를 늘리는 차원에서 부정 청약 시도는 반드시 찾아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 당첨 조사 횟수를 늘리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KEB하나은행 '투자상품 리콜제' 도입...“DLF 분조위 결정 수용”

매수원금·판매 수수료 반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의 중심에 놓인 우리는 행과 KEB하나은행이 잇따라 고객에게 사과하고 '배상'을 거론하며 재발 방지책을 추가로 내놨다. 내달부터 진행되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절차를 앞두고 분조위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17일 "DLF로 인해 손님이 입은 금전적 손실, 심적 고통과 심려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분조위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따르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일 금융감독원 DLF 합동검사 중간 발표 이후 지성규 행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 사과의 뜻을 밝히고 분쟁 조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것에서 한발 나아간 것이다. 하나은행은 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원칙적으로 방지하겠다고 5가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판매한 투자상품이 불완전판매로 판단될 경우 고객에게 철회를 보장하는 리콜제(책임판매제도)를 도입한다. 리콜 방침이 정해지면 매수 원금과 판매 수수료를 전부 고객에게 돌려준다. 고위험 투자 상품을 판매했을 경우엔

이후 전문가가 검토(리뷰)해 상품 판매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거래신청서, 투자설명서 작성 등 상품 판매 전 과정을 스마트창구 업무로 구현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을 개발해 적용한다. 필체를 인식하는 인공지능(AI) 모형도 개발해 고객이 자필로 기재한 필수항목의

누락·오기재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자 상품에 대한 상품위원회의 검토 결과는 리스크 관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신설, 상품 도입 단계에서부터 리스크를 점검할 계획이다. 전남 하나은행도 분조위의 조정 결정을 존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조속

한 배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재발 방지를 위해 고객에게 펀드 가입 전 투자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투자 숙려제도'와 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 이를 철회할 권한을 주는 '고객 철회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금융경제강좌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18일 오후 2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하반기 금융경제강좌' 세 번째 시간으로 박성수 광주전남연구원장의 '남도의 신성장동력을 찾아서' 강연을 무료로 연다. 지난 달 27일 열린 전영수 한양대 교수의 강의 모습. <한은 광주전남본부 제공>

금투협,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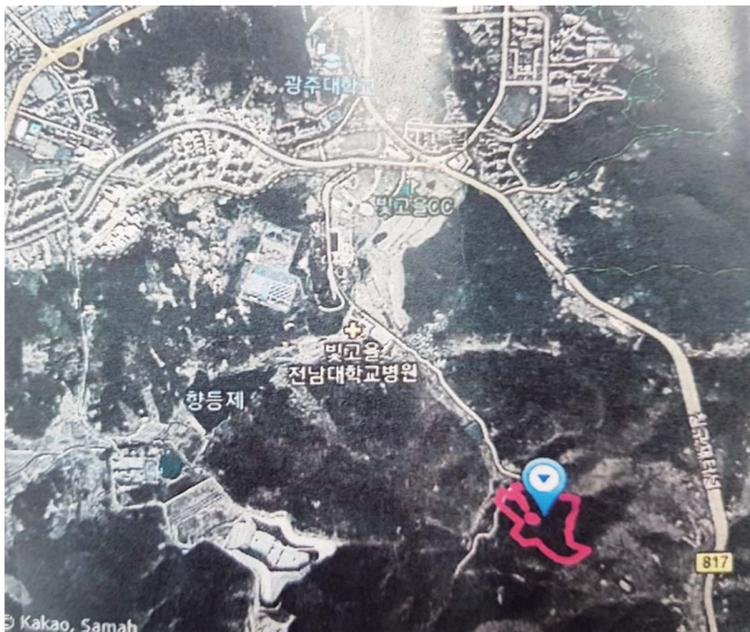
오늘 목포 신안비치호텔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는 "18일 오전 11시 목포시 죽교동 신안비치호텔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교육'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금투협은 한국소비자연맹과 공동으로 목포 강연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4차례에 걸쳐 금융소비자 보호 교육을 펼친다. 이날 강의 대상은 소비자연맹 목포지회 소속 모니터링단 50여 명이다. 이번 교육은 금융투자상품 가입 절차 단계별 유의사항을 소개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마련됐

다. 강연은 '금융투자상품 가입절차 관련 단계별 유의사항'을 주제로 진행된다. '금융투자상품 정의 및 종류' '상품 특성' 가입 관련 주의사항' 등으로 내용이 채워진다. ▲투자자정보 확인서 작성 ▲투자자 유형 분류 ▲투자설명서 내용 확인 ▲상품계약서 서명 ▲판매 후 모니터링 등 가입절차별 유의사항도 소개한다. 금투협은 앞으로 소비자연맹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교육, 민원·분쟁 관련 자문업무 등 다양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기업은행, 6억 달러 규모 글로벌 채권 발행

IBK기업은행은 총 6억달러 규모의 글로벌채권 발행을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엔 발행한 채권은 3개월 리보(LIBOR·런던 은행 간 금리)에 0.45%포인트를 더한 만기 3년의 변동금리 채권과 만기 5년의 2.17% 고정금리 채권 두 종류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다양한 투자자의 선호를 맞추기 위해 변동·고정금리 두 종류의 채권 발행을 동시에 진행해 청약 규모가 40억달러에 이를 정도로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덕남동, 임야 급매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

- 992㎡, 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덕남동 산64-21번지)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일시불 조정가)

문의. 010-6834-7400